

북한의 외국자본 도입 : 실적과 정책*

金 秀 勇

- I. 서 론
- II. 외국자본도입의 필요성과 형태
- III. 북한의 자본도입 실적
- IV. 북한의 외채규모
- V.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 VI. 외국자본도입을 위한 북한의 정책방향

I. 서 론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 경제는 199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3.7%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1991년과 92년, 그리고 93년에도 연속하여 負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와서 경제사정이 악화된 이유는 1980년대말 이후의 東歐와 소련에서의 개혁과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가장 큰 원조의 제공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원조적 성격의 무역 대신 세계시장가격에 입각한 硬貨결제의 무역을 요구하게 되었다. 東歐의 여러나라들과의 무역에서도 마찬

* 본 연구는 1993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임.

가지로 과거의 장기계약에 입각한 무역거래는 사라지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계속 표방하는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원조적 성격이나 물물교환적인 무역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輸入능력은 크게 제약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수입의 제약은 식량난, 에너지난과 함께 原料와 資本財의 부족을 초래하고 전체적인 경제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외국인 직접투자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크게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에 대외무역의 증대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1984년의 合營法의 내용을 고쳐 외국인 투자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1년에 나진과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것도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표시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의 외국자본의 도입은 특정지역 내에서의 생산활동이나 수출을 위한 생산에서의 직접투자에 한정되어 촉진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는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품목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도입에 있어 직접투자만이 논의되고 차관형태의 도입은 정책적 추진의 대상이 안되고 있는 듯하다.

아직도 북한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 6기 제 21차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3년간 (1994-96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방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신용, 수출품생산기지 건설, 수출품 생산증대, 품질향상, 가공무역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김일성은 역설하였다.¹⁾ 그러나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국자

1) 1994년도 김일성 신년사.

본도입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이나 원조, 직접투자가 없이는 북한이 수출생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994년 7월의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의 권력구조와 주요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큰 변화를 보일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문제에서는 농업, 경공업, 수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책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김일성 생전보다 오히려 더 이들 부문을 촉진하여 기본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 노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에서의 외국자본의 역할과 외국자본의 도입실적, 그리고 외국자본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2절에서 외국자본도입의 필요성과 형태의 일반적 고찰을 하고, 3절에서는 북한 외자도입의 실적을 분석한다. 4절에서 북한의 외채규모에 대해 논의한 다음, 외자도입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5절에서 다루고 6절에서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외국자본도입의 필요성과 형태

개발도상국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경제발전에 매우 긴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거의 예외없이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본이 희소하다. 자본이 희소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자본의 수익율이 선진국보다 높고 따라서 자본은 수익율이 낮은 선진국에서 수익율이 높은 개도국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 자본의 이동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개도국은 자본의 부족 때문에 높은 예상수익율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수 없었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므로 利子와 元金을 초과하는 소득을 달성할 수 있고 선진국은 국내에서 보다 더 높은 자본수익율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즉 개도국은 借入에 의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료나 기계설비를 수입할 수 있게 되고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물론 輸出을 통해서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輸入수요가 항상 수출보다 크기 때문에 외자도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海外로부터의 차관도입은 外國의 정부나 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상업은행 등을 통해 가능하다. 차관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현금과 이자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될 때에만 차관을 공여하려할 것이지만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부담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차관은 개도국중에서도 경제성장 전망이 밝고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에는 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 중진국들이 가장 큰 차관도입국들이었다.

그러나 도입된 차관으로 투자한 사업이 차관의 상환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전환문제 (trans - formation problem)인데 이러한 문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이유로 수출의 증가나 수입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매우 적을 수 있고 또한 차관기간에 비해 사업의 회임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개도국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도입된 자본이 투자보다는 소비에 사용될 수도 있고 해외 자본도피(capital flight)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어쨌든 1980년대초의 세계적인 外債위기(debt crisis)는 개도국으로의 차관유입을 크게 감소하게 만들었다.²⁾

2) 1980-83년에는 국제상업은행의 對 개도국 차관규모는 연평균 417억달러에 달했으나 1984-89년에는 연평균 100억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OECD(1990,p.200).

개도국이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차관과 함께 중요한 것은 外國人 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차관과 달리 원금과 이자의 상환부담이 없는 대신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경영에 직접참여하여 利潤을 가져 간다. 그러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함께 경영기술, 생산기술이 함께 도입되는 형태이며 개도국은 투자사업의 위험부담이 없는 대신 기업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투자자에게 준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개도국에서는 되도록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수출가공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간접시설을 확대하고 시설재나 원료의 수입에 관세혜택을 부여하며, 기업활동을 통한 소득에 대해 면세나 조세감면의 혜택도 부여한다. 이윤의 송금을 보장하고 임금이나 환율이 안정되게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외국기업에게 중요한 인센티브가 된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도 매우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선진국시장의 수입장벽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또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생산기술이나 경영지식들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직접투자방식을 택하는 수가 많다. 원료나 중간재의 안정적인 확보나 판매를 위해서 前後方으로 연결된 기업형태를 위한 직접투자도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일부 개도국들도 근년에 해외직접투자를 빠르게 증가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의하면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의 순유입은 1985-89년 기간에는 연평균 130억 달러 정도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나 1991년에는 309억 달러나 되었다.

차관이나 직접투자가 아니고 개도국이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원조를 받는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1992년에 600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 총 GNP의 0.33%에 해당되는 크기였다.³⁾ 대외원조는 원조 제공국가가 직접 원조를 받는 나라를 선택하여 제공하는 이국간원조(bilateral aid)와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다국간원조(multilateral aid)로 나누어진다. 또한 원조 제공방식에 따라 양허성 차관이 될 수도 있고 무상원조가 될 수도 있다.

소련은 1990년 붕괴 이전에는 매우 중요한 원조 제공국가였다. 물론 소련의 원조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집중된 것이었지만 1988년의 경우 원조제공액이 42억달러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다섯번째로 큰 원조제공국이었다.⁴⁾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하여 구 소련의 모든 공화국들은 더 이상 원조제공국이 아니고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원조를 고대하는 입장이 되었다.

III. 북한의 자본도입 실적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와 차관의 형태로 자본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으로부터의 차관과 함께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차관이 중요한 외국자본 조달방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外債에 대한 상황이 어려워져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84년 9월에 공포된 合營法은 차관이나 무상원조형태의 자본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접투자 형태로 외국자본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무상원조와 원조적 성격의 차관은 1945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식량, 연료등의 필수품에서

3) *The Economist*, September 25th.1993, p.128.

4) OECD (1990) p.205.

6.25후의 생산설비의 복구와 새로운 건설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규모의 원조가 제공되었다. 1950년대까지는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고 1960년대부터는 長期低利의 차관이 대부분이었다.

1953년부터 1960년 사이에 북한은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8억7,900만루블의 무상원조를 받았다.

<表 1> 북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무상원조(1953-60)

국 가	금액(백만루블)	구성비(%)
소련	292.5	33.3
중국	258.4	29.4
동독	122.7	14.0
폴란드	81.9	9.3
체코슬로바키아	61.0	6.9
루마니아	22.0	2.5
헝가리	21.0	2.4
불가리아	18.7	2.1
기타	1.1	0.1
합 계	879.3	100

자 료 : Bazhanova(1992), p.22.

<表 2>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1971. 1.1 현재)
(단위 : 백만루블)

국 가	공여액	사용액	잔 액	상환액
소련	552.1	189.7	362.4	5.3
중국	141.7	141.7	-	10.1
체코슬로바키아	87.1	87.1	-	27.1
동독	26.7	10.7	16.0	7.2
폴란드	12.2	10.2	2.0	5.0
루마니아	9.0	9.0	-	-
헝가리	8.0	8.0	-	4.2
합 계	836.8	456.4	380.4	73.9

자 료 : Bazhanova(1992), p.26

<表 1>에서 보듯이 이 중 33.3%에 해당하는 2억 9,250만루블이 소련, 그리고 29.4%에 해당하는 2억 5,840만루블이 중국에 의해 제공된 것이었다. 나머지는 주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제공하였다.

1971년초까지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규모는 8억 3,680만 루블이었는데 이 중 66%에 해당하는 5억 5210만루블이 소련으로부터의 차관이었다(表 2참조). 이들 차관은 1-2%의 이자에 장기 거치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북한은 상당기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불기한이 되어도 지불능력이 없을 때는 상환의 연기나 채무면제, 이자삭감등의 조치가 종종 이루어 졌다고 구소련의 자료는 기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채무면제나 이자삭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⁵⁾ 어쨌든 채무면제나 이자삭감 등은 무상원조로 간주될 것이다. Radio Moscow에 의하면 1988년초까지 소련은 1948년 이래 총 20억달러(12억루블)의 무상원조를 북한에 제공했다. 이를 사용하여 북한은 전력, 석유제품, 철강, 알루미늄등을 생산하는 70여개의 주요생산설비를 갖추 수 있었다.⁶⁾

경제건설을 위한 수입수요는 매우 높고 수출능력은 극히 한정되어 있던 1950년대에 북한은 수입의 대부분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나 정부차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1954-56년의 경우 북한 수입의 80% 이상이 이러한 원조에 의해 조달되었다.⁷⁾ 이러한 사정은 당시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53-62년의 10년간 외국원조의 남한 수입에 대한 평균 비율은 71%나 되었다. 북한과의 차이점의 하나는 남한의 경우 대부분의 원조가 미국 한 나라에 의해 조달된 것이라는 점이다.⁸⁾ 남한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63년 이후부터

5) *Bazhanova*(1992), p.26.

6) *EIU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No 2, 1989, p.42.

7) *Bazhanova*, p.24.

8) *Kim and Kim* (1992), p.17.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대신 남한은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개발원조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전자는 1962년부터 후자는 1968년부터 한국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차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제원조기구인 UNDP는 1980년에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북한에 대한 주요한 원조 공여기구가 되었다.⁹⁾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나 차관의 제공은 195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1976-1981 기간에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이 매우 저조했다. 1960년대 후반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경제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북한이 소련처럼 『수정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1976년 毛澤東 사망 후 중국의 새로운 집권층이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미국·일본등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북한은 이를 비난함으로써 또 다시 두 나라 사이는 벌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주로 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61년 - 1970년 사이에 1억 4,170만루블의 차관이 제공되었다.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차관의 상황은 북한이 아연, 무연탄등의 1차 산품이나 차관으로 건설된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대신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초부터 북한은 서방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방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¹⁰⁾ 북한은 1973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974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1975년에는 포르투갈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서방과의 경제교류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반영하여 북한의

9) UNDP는 1980-91년 기간에 4,216만달러의 원조사업을 추진했고 1992-96년 기간에는 2,633만 달러의 사업을 진행중이다. 통일원, 月刊 북한동향 (1994.3)참조.

10) 북한이 처음 서방세계로부터 차관을 도입한 것은 1964년 네델란드로부터 요소 공장설비와 냉동선구입을 위한 차관이었다. Bazhanova(1992), p.249.

수출과 수입을 더한 총무역액은 1970년의 8억 560만달러에서 1975년에는 20억 7,790만달러로 5년간 158%나 증가했다.¹¹⁾ 1965-70년 기간의 증가율은 83%, 1975-80년 기간에는 65%였음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늘어난 것은 수입이었다. 1970-75년 기간에 수출은 3억 3,320만달러에서 7억 6,730만달러로 130%나 증가했고 수입은 4억 7,240만달러에서 13억 1,060만달러로 177% 증가했다. 수입이 보다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 기간동안에 무역수지의 적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같은 대규모의 무역적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의 도입이 이 기간에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1-74년 사이에 일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로부터 차관을 얻어 이들 나라들에서 기계, 장비등을 수입했다. 또한 1973년에는 국제은행 컨소시엄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¹²⁾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차관도입의 증가로 북한의 총수입에서 서방세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방세계와의 무역이라고 할 때 북한의 수입에서 서방세계의 비중은 1971년에는 불과 11.6%였으나 1974년에는 57.7%로 늘어나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보다 높아지게 되었다.¹³⁾

그러나 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 차관은 북한이 1970년대 중반부터 기존차관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중단되거나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4-5년부터 국제시장의 여건은 북한에 매우 불리하게 움직였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아연, 동 등의 비철금속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기계류, 석유등의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11) 국토통일원(1989).

12) Bazhanova(1992), p.251.

13) 연하청(1990), p.207.

북한내의 생산능력의 한계 때문에 무연탄등 주요수출품의 생산이 크게 늘어날 수 없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976년에 외채지불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국토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970-76년 기간에 총 2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는데 이 중 12억 4천만달러가 서방 선진국들로부터의 차관이고 9억 1천만달러는 소련이 제공한 것이었다.¹⁴⁾ 1978-84년 기간에는 북한은 약 3억달러의 차관만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부 소련이 제공한 것이고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북한은 2억 6천만달러의 무상원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제공한 것이었다.(表 3 참조)

전술한 바와같이 소련은 1948-88년 사이에 북한에 대해 총 20억 달러(12억루블)의 무상원조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表 3>의 국토통일원 추계치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통일원 자료는 1984년까지의 무상원조 총액이 15억달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구 여러나라의 원조까지 다 포함된 것이므로 소련의 원조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表 1>에서 보듯이 1953-60년 기간에 소련의 무상원조는 사회주의국가 전체 무상원조의 1/3수준이었다.

<表 3> 북한의 무상원조, 차관도입 실적 (1945-1984) (단위:백만달러)

기 간	원조	차관	합 계
1945 - 1960	1,278	428	1,706
1961 - 1969	-	337	337
1970 - 1977	-	2,150	2,150
1978 - 1984	259	296	555
합 계	1,537	3,211	4,748

자 료: 민족통일연구소(1993) 국토통일원(1986)

14) 서방선진국들로부터의 차관 중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2억 8천만달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독으로부터의 1억 5천만달러였다. 통일원(1988), p.99.

북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외자도입은 몇년전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해외 직접투자는 본래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자본이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체제라도 외국의 민간기업에게 기업활동과 송금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경험에 자극을 받고, 외채문제 때문에 새로운 차관의 도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상환부담이 없는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1992년말까지 유치한 직접투자의 건수는 약 140개 정도이고 이 중 90% 정도가 조총련계 일본기업에 의한 투자이다. 투자규모는 1천만달러 이상이 10여건, 500만달러 이상이 약 30%,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1백만달러내외의 소규모 투자다. 총 투자유치금액은 약 1억 5천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이들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잇점을 이용하는 수출위주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나 북한에서 발달수준이 매우 낮은 서비스의 국내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1993년에는 외국인 투자실적이 조총련계의 투자 1건에 그쳐 매우 부진한 유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¹⁶⁾ 1992년 6월 현재 조업중인 69개 조총련계 투자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평양이 42개로 전체의 60%가 평양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함흥, 원산, 청진 등에 분산되어 있다.¹⁷⁾

중국, 소련등 사회주의국가들과의 합영사업은 자본이나 기술의 이동을 거의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합작생산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15)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129 및 28.

16) 통일원, 月刊 북한동향 1993.8 및 1994.2.

17) 金裕炫(1993), p.202.

소련이 공급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공장에서 의복을 생산한 다음 소련으로 보내면 소련공장에서는 여기에 마지막 손질을 가한 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1988년의 경우 북한은 6천만벌의 의류를 생산하여 소련에 공급했다. 이를 위한 소련으로부터의 기술자의 파견과 장비의 제공도 있었지만 소련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었다.¹⁸⁾

IV. 북한의 외채규모

1960년대말까지 북한은 외채문제를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우선 무역수지의 적자가 그리 크지 않았고, 이들 적자는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나 원조형태의 장기차관의 도입으로 조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외채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1970년대초부터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세계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대폭 증가시키고, 이를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적인 무역수지의 적자로 차관을 상환할 수 없었고 차관의 원금과 연체된 이자의 증가로 총 외채규모가 계속 증가해 왔다.

북한의 무역수지는 1978년과 79년을 제외하면 1950년 이후 계속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적자규모가 커진 1970년대 이후를 보면 <表 4>에 나타나듯이 1971-75년의 5년 동안 무역적자규모가 22억달러를 초과하였고, 이것은 같은 기간동안 총수출의 82%나 되는 규모였다. 1976-80년 기간에는 적자규모가 6억달러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다시 늘어나 1981-85년에는 18억 달러, 1986-90년에는 54억 달러로 각각 확대되었다.

18) EIU,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No.2, 1989, p.43.

<表 4> 북한의 무역수지적자 (1971-1990)

(단위:백만달러)

기 간	수출액(A)	수입액(B)	무역수지(C)	C/A
1971 - 75	2,760.0	5,085.2	-2,289.2	81.9
1976 - 80	5,653.5	6,229.6	- 576.1	10.2
1981 - 85	5,965.8	7,840.8	-1,875.0	31.4
1986 - 90	8,174.9	13,595.8	-5,420.9	66.3
합 계			-9,642.7	

자료 : 민족통일연구소 (1993), p.358, 362.

1971-90년 사이의 총 무역수지적자는 96억달러나 된다. 이와같은 적자가 조달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밖에 없다. 상품무역의 적자는 운수, 보험, 투자수익 등의 무역외수지와 무상원조등의 이전거래수지의 흑자로 상쇄되거나 장단기 차관, 직접투자등의 자본유입으로 상쇄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통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무역외수지가 흑자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고 직접투자의 유입도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없었다. 외환보유고도 처음부터 낮았을 수 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적자의 조달 방법은 원조등의 이전거래와 해외로부터의 차입 밖에 없다.

해외로부터의 이전은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의 무상원조와 일본의 조총련 교포들에 의한 對북한 송금 중에서 상품수입대금이나 직접투자를 제외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1985년 이후에는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가 거의 없었다고 본다면 해외로부터의 이전은 일본교포의 송금이 주요 원천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송금의 크기는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에 비할 때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적자는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입이 계속됨으로써 북한의 외채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表 5>는 북한의 외채규모에 대한 한국 統一院의 추계치와 몇 개의 다른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통일원의 추계치에 의하면 1975년 말에 21억달러에 달했던 북한의 외채는 1991년에는 92억 8천만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1986년 이후 5년 동안에 50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앞의 <表 4>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1986-90년 기간에 무역적자가 54억달러나 되었다는 사실과 대체로 일치된다.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 20억달러 정도의 외채가 늘어났다는 것도 1976-85년 사이의 무역적자액 24억달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외채원금에 대한 이자를 고려해야 하므로 외채증가액은 무역적자액보다 커야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적자의 일부는 해외교포의 송금으로 조달된다는 사실과 또 다른 일부는 상환이 면제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외채증가액은 무역적자액보다 작을 수도 있다.

1992년말 현재 북한의 외채추계 97억달러중 1/2 정도는 소련(러시아)에 대한 부채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외무성의 주장에 의하면 1994년 1월 현재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채무는 1990년 가격으로 30억 루블을 상회한다는 것인데¹⁹⁾ 1990년의 공식환율을 적용한 경우 30억 루블은 50억달러에 해당된다.

그러나 북한의 외채규모에 대한 추계치는 추계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表 5>에서 보듯이 1987년말 현재 통일원에 의하면 북한 외채는 47.8억달러이지만 OECD의 추계치는 42.3억 달러이고 북한수상 리근모에 의하면 10억달러이다. 1990년-92년시점에서의 외채추계치도 외국의 기관이나 학자들의 추계치에 비해 통일원 추계치는 항상 높다. 1990년의 경우 통일원 추계치는 79억달러인데 OECD에서는 47억달러 정도라고 했다. 1991년말 기준으로 통일원 추계는 93억 달러임에 비해 러시아의 한 국제경제연구소의 추계치는 67억달러였다.

19) 통일원, 月刊 북한동향, 1994.1. p.70.

<表 5> 북한의 외채에 대한 상이한 추계치

단위:억달러

년도	통일원추정치 ¹⁾			OECD ²⁾	리근모 ³⁾	Kuriba-yashi ⁴⁾	러시아 연구소 ⁵⁾
	공산권	서방권	합계				
1975	9.0	12.0	21.0				
1980	12.4	22.2	34.6	36.4			
1986	18.3	22.3	40.6	42.3	10.0		
1987	19.8	28.0	47.8	40.8			
1988	24.7	27.3	52.0	44.6			
1989	40.4	27.4	67.8	47.2			
1990	-	-	78.6				
1991	-	-	92.8				67
1992	-	-	97.2			74.0	

자료: 1) 민족통일연구소(1993), p.395.

2) OECD, Financing and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EIU, Country Profile : South Korea, North Korea, 1993/94, p.75에서 재인용.

3) Institute of Asian Affairs(Hamburg), North Korea Quarterly, No.56, Spring 1990, p.58.

4) S.Kuribayashi(1993), p.107.

5) 조선일보, 1993.3.31.

이와같은 추계의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인인지 말하기 어렵다. 수출이나 수입의 크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연체이자의 계산이나 환율적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부채의 탕감이 있을 때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외국으로부터의 북한에 대한 이전지불 형태의 송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역시 외채를 추정하는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1992년말 현재의 정확한 외채규모는 50억내지

100억달러 사이에 있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1992년 북한의 수출규모 9억 2천만달러에 비추어 이 규모는 6배 내지 11배가 되는 것이다. 수출의 10배 내외의 외채규모라면 어느 국가의 경우에도 대단히 큰 규모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은, 특히 90년대에는, GNP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GNP대비 외채규모는 그리 높지는 않게 된다. 북한의 1인당 GNP를 대략 1,000달러라고 본다면 북한의 GNP는 대략 200억 달러가 된다. 따라서 북한 외채의 대 GNP비중은 25% 내지 50%가 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니다.

<表 5>에서 인용한 OECD자료에 따르면 1990년 현재 총외채 47억 달러 중 37.8억달러가 장기외채이고 9.4억달러가 단기외채다. 즉 총외채의 80%가 장기외채다. 이 비율을 50억내지 100억달러에 적용하면 40억내지 80억달러가 장기 외채다. 따라서 GNP대비 장기외채의 비율은 20% 내지 40%가 된다. 그런데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이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외채위기 이전인 1980-82년에 45개 주요 개도국의 장기외채/GNP비율을 보면 타이랜드, 베네주엘라, 한국, 말레이시아, 터키, 포르투갈 등 24개국이 20-40% 사이에 있었고 40% 이상인 나라들도 아르헨티나, 칠레, 모로코, 이집트등 21개국이나 되었다.²⁰⁾ 1991년의 경우를 보면 인구는 100만 이상이며 1인당 GNP가 2,500달러 미만인 82개 개도국 중에서 총외채/GNP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나라는 51개국이나 되었다.²¹⁾ 북한의 총외채/GNP의 비율은 50% 미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북한의 외채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989년에는 서방의 일부 채권은행들 사이에서 북한이 1991년 내에 채무의 1/3만 갚는다면 나머지 2/3는 탕감해 주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채권은행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북한에 정식으로

20) World Bank(1985), p.44.

21) World Bank(1993), pp.284-85.

제안되지는 않았다.²²⁾

V.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전술한 바와같이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소련, 중국등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와 차관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재, 원료, 기술 등을 조달하였다. 1970년초에는 보다 의욕적인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서방세계로부터 상업차관을 과감히 도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수출의 부진과 교역조건의 악화로 차관의 상황이 어렵게 되고 세계금융시장에서 북한의 신용도는 최하위에 머물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추가적인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선택은 몇 가지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즉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상업차관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이나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의 무상원조나 차관도입은 이들 나라에서의 경제개혁과 정치적 변혁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1970년대말부터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막대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의 외국자본 유치를 시도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직접투자 이외의 가능한 자본유치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두 가지 정책은 합영법의 공포와 羅津·先鋒지역의 “自由經濟貿易地帶”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 EIU, (1993/94), p.74.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공포하고 1985년 3월에 합영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합영법 시행세칙은 1992년 10월에 개정되었다. 1994년 1월에는 개정된 합영법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합영법 시행세칙도 곧 다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합영법이 5장 26조로 구성되어있던 것에 비해 신 합영법은 5장 47조로 보다 세분화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합영법과 구합영법의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조에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구법에서의 '재일 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이라는 표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일 조선상공인들을 특별히 지칭한 부분의 삭제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표현문구의 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 법의 7조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의 합영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등의 우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장려하는 대상에 대한 합영과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해서도 우대한다고 되어있다. 국가가 장려하는 대상은 제 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및 기술개발 대상'들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구법에서는 합영기업은 '생산을 시작할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21조)라고 되어 있었으나 새 법에서는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는 특정 지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투자한 자본과 소

득에 대한 보장, 그리고 관세, 소득세등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이다. 1993년 1월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1994년 2월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이 발표되었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91년 12월에 羅津市와 先鋒郡의 일부인 621km²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다. 이 지역은 북으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中國과 러시아에 접해 있으며 동쪽은 東海에 면해 있고 羅津港과 先鋒港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철도와 도로가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같은 입지여건에서 보듯이 羅津·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소위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지정된 것이다.

두만강 하구지역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일 뿐만아니라 극동 러시아, 중국의 동북지역, 몽골, 남·북한,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특히 남한과 일본이 러시아, 중국, 몽골과 상품무역을 할 때, 많은 경우 두만강지역의 항구를 거치는 것이 운송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므로 이 지역이 앞으로 급속도로 확장될 동북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전망은 매우 높다.

현재 UNDP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북한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羅津, 先鋒, 清津의 세 항구가 동북아시아 화물운송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투자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만강의 3국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몽골, 남한, 일본 포함)은 이제까지 상호간의 경제교류가 잠재력에 비해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조했던 경제교류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적, 경제적 장애요인이 급속히 제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지역내의 상호교류는 급속히 늘어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교류 확장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은 북한의 羅津·先鋒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항구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력과 지하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지역에 대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은 이 지역을 단순한 동북아무역의 중계항구로서 발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같은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이 지역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생산은 물론 금융, 보험, 운송, 관광등 서비스생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經濟特區처럼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효과적인 외자유치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진전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각 형태에 적용되는 법률을 공포하였다. 먼저 합작 기업의 형태는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은 북한측이 하는 것을 말하고 합영기업은 투자와 운영을 북한측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하는 형태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의 법인과 개인들의 외국인기업 창설과 운영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가능하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1994.2)에 의하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보다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다. 즉 기업소득세율이 후자의 경우는 25%인데 전자의 경우는 14%이며 기타 소득에서도 20%대 10%가 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생

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될 수 있다. 봉사부문(서비스)과 도로, 항만등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경우에도 생산부문과 비슷한 혜택을 부여한다. 운수, 금융, 관광등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떨어준다.

외국자본의 유치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법률의 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성공적이지 못하다. 전술한 바와같이 유일하게 성과가 큰 부분은 조총련계의 재일교포들과의 합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초 현재 북한에서 조업중인 140여개의 합영사업체 중 120여개가 조총련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 일본 공안조사청장관의 추정에 의하면 일본 조총련의 북한에 대한 송금액수는 연간 5억 8천만 내지 7억 7천만달러(600억내지 800억엔)에 이른다.²⁴⁾ 연간 10억달러가 넘으리라는 추정도 있다.

對 북한송금은 북한과의 합영사업을 위한 자금 이외에 무역대금의 지불, 친척에게 보내는 돈, 북한 노동당에 대한 현금 등이 대부분이고 이 금액은 은행을 통한 송금 외에 북한으로 직접 가지고 가거나 북한 방문자 편에 전달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추정한 것이다.

북한이 외국자본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혀 수출의 전망을 밝히거나 북한 내수시장의 확대가 기대되어야 한다. 아니면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급속한 진전으로 북한의 두만강지역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북한이 1994-96년의 완충기간 중 전략적 방침으로 '무역제일주의'를 제시한 것은 타당한 방향설정이다. 북한 당국자들도 인식하는 바와같이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품 공장들의 장비를 개선하고 현대화

23) 통일원, 月刊 북한동향, 1994.3. 그러나 이들 120여개의 사업체 중 과연 몇개나 수익성 면에서 성공적인가는 별도의 문제다. 단지 10개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Time, April 4, 1994, p.17.

24) 통일원, 전거서.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 문제다.

VI. 외국자본도입을 위한 북한의 정책방향

북한은 외국자본유치에 실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의 유치를 가로막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이다.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대립이 현재보다 완화되면 남한의 對 북한 경제협력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자금의 유입은 물론 일본기업의 북한 진출도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해소되고 북한이 서방세계에 적대적인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미국등 서방선진국의 對 북한 경제협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되면 이들로 부터의 장기개발차관 도입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북한은 현재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옹호'라는 대전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선택이 극히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과거 북한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 무역의 주상대국이었던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동구의 여러나라들은 모두가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중 어느 나라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려는 의도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련의 붕괴와 COMECON의 와해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과의 특혜적이고 안정적인 무역거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여건에서 북한이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부분적으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 등과의 교류확대를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 1970년대 초반처럼 세계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하거나 1980년대 후반 이후처럼 외국인 직접투자를 도입하는 노력의 대상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은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대립관계를 야기시켜 이들 잠재적 교류대상국들과의 경제교류를 차단해 왔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정치적 협상의 결과 북한이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나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경제에 관한 한 공적원조(ODA)의 제공, 국제경제기구에 가입 허용, 민간부문의 경제교류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이 전부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북한이 정치적 마찰을 야기시키지 않고도 더 빠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정치적 장애요인이 없다면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직접투자와 상품무역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는 다른 선진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수출이 확대되고 성장이 촉진되는 한편 국제수지의 적자문제가 해소된다면 북한은 차관 도입에서도 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은 이제까지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세계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자신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도입과 수출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영법 제정,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북한경제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유지해온 것은 김일성의 서방세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김일성의 퇴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의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에서 정치적 요인을 되도록 배제하고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한국의 자본이나 기술이 북한에 진출할 것인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등 정치적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할 분야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개별기업이 스스로의 판단과 위험부담 하에서 경제교류를 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투자보장, 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거래에 필요한 외국환은행간 환거래, 물자 및 사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특히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은 장래 동북아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진출은 북한경제의 성장과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는 일본등 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촉진할 것이다. 통일 후의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1. 김용현, “북한의 투자환경”, 계간 북한연구, 1993, 겨울.
2.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3.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8및 1989.
4. 통일원, 月刊 북한동향, 각호.
5.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1993.
6. 민족통일연구소,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1993.
7. 연하청, “북한의 무역및 대외경제협력”,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 1990.
8. Bazhanova, Natalia, Between Dead Dogmas and Practical Requiremen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f North Korea 1945-1990, 1992, 양준용 역, 기로에선 북한경제, 1992.
9. EIU, Country Profile: South Korea, North Korea, 1993/94.
10. Institute of Asian Affairs, North Korea Quarterly, Spring 1990.
11. Kim, Sooyong and Wan-soon Kim,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Performance, Prospects and Policy, ITBI/ICEG, 1992.
12. Kuribayashi, Sumio, ed. Rethinking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east Asia,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1993.
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1990 Report, 1990.
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 and 1993.